

신뢰 받는 농정 기틀 마련해야



정종화
낙농진흥회 농가연합회장

향후 우리나라의 낙농발전대책의 핵심이 될 틀을 마련하고자 새로이 구성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인가 하는데는 그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듯하다. 먼저 그 조직 구성면에서 살펴보면 낙농산업발전대책 기획안의 초안을 작성할 실무자 회의가 있으며 그 실무자들이 담당한 분야별로 작성한 그 초안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할 협의회로 나뉘어져 각자 역할분담 형태로 운영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낙농산업발전대책 실무자회의 구성이나 운영을 살펴보면 실무위원 9명 중 주요핵심사항의 기획은 농림부 서기관 한사람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편중되어 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너무 촉박한 일정관계로 현장의 소리를 청취 또는 의견 수렴하여 반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시 짜여질 앞으로 한국낙농의 백년지대계를 세울 참으로 중차대한 계획안을 다시 짜고 결정짓는데 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아울러 서둘러 급조된 낙농진흥법과 시행령을 만들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외되고 힘없는 낙농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금 진흥회 소속 농가들이 정부시책에 순응한 댓가로 겪고있는 불평등 처우가 다시 재연될 공산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아무튼 낙농진흥회 설립 당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순박하게 정부시책에 잘 따르고 제시된 약속들을 철석같이 믿고 순응한 댓가로 진흥회 소속 농가들만이 집중적으로 일반 유업체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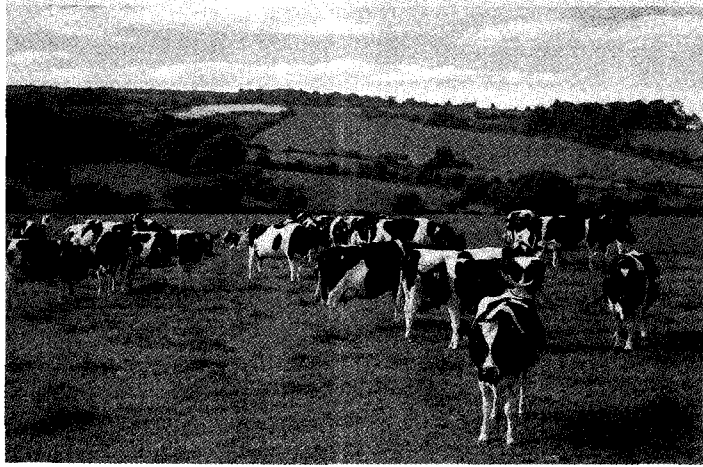
유농가들에 비해 몇 곱절 더한 피해를 받아온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새로이 구성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가 또다시 힘없는 특정집단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협의회로 운영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실무자회의 위원들이나 협의회 위원들 모

두가 실권의 경(輕)·중(重)이 배제되고 동등한 권한과 역할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 위원 몇 사람의 주도 하에 짜여진 농림부의 각본대로 힘과 숫자로 밀어 붙이기식이나 농림부 정책의 들러리 위원회가 되어 거수기나 박수부대 역할이나 하는 행태가 재연되어져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흥회 농가나 일반유업체 남유농가나 형평성에 맞게 동등한 기준과 동등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잘못 적용받고 있는 불이익 조치 또한 모두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시책이나 지시를 믿고 따르며 원유생산 감축하라고 할 때 솔선하여 정부시책을 믿고 따르며 순응한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고 감축하라고 할 때 오히려 약삭빠르게 소를 사들이고 비유 축진제까지 써가며 산유량을 대폭 증진시킨 농가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게되고 잘못된 평균량 기준 설정시기 문제에서부터 최근에 실행되고 있는 잘못된 조치들로 인해 “정부시책에 순응하면 망하고 역행하면 흥한다”는 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에 자조 섞인 유행어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를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신뢰받는 농정의 틀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낙농관련 자료(특히 진흥회의 원유유통에 관련한)들이 비밀이라는 평

계로 공개를 거부하지 말고 완전히 공개하여 그 공개된 자료가 사실인지 여부를 생산자 대표들이 선명하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와 같이 진흥회 총회나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낙농가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진흥회 회장, 감사 역시 낙하산 타고 내려온 농림부 퇴임인사들로 채워져



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소속 낙농인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 대표권은 물론이고 의사결정과 집행부와 농림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과 견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체제로 틀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는 낙농진흥회 가입이 자율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전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진흥회에 가입하여 정부시책에 순응한 농가에게 지금 상황과 같은 일반 유업체농가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조치가 아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진흥회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사안들이 전체 낙농가를 위한 방향으로 그 뜻이 모아져야 할 것이며 특정집단의 이해득실로 인해 또다시 기형적인 낙농진흥법과 시행령처럼 핵심이 왜곡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집단의 이해득실로 인해 또다시 기형적인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도 업무용수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우리협회에서는 매년 업무용 수첨을 제작·공급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빠른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고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올해도 2004년도 업무용 수첨을 제작·공급하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회원여러분들께 무료로 제작·공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되으나 협회의 자금 형편상 제작원가의 일부분만을 받고 공급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 규 격: 국판(가로 15cm × 세로 22cm)
- 나. 지면 수: 350면(협회추가란 100면, 메모란 250면)
- 다. 신청마감일: 2003년 11월 20일
- 라. 공급예정일: 2003년 12월 중순
- 마. 제작가격: 4,000원/부당
- 바. 회원공급가격: 3,000원/부당, 개인신청시는 4,000원
- 사. 대금납부방법: 신청시 50%, 수령시 50%(단, 개인신청시는 100%선납)

